

새정치 전대 앞두고 '빅3' 견제 본격화

〈박지원·문재인·정세균〉

김동철·박주선 의원 등 '경선 룰 입김' 우려 비대위원직 조기 사퇴 압박

문화상 "예산전쟁 막바지 지도부 공백 안된다"…12월 중순 사퇴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빅 3'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룰과 관련, '빅 3'의 비대위원직 조기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빅 3'가 비대위원직 사퇴 시기를 늦추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만들기 위해 '정치적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선수가 경기가 시작하기 직전까지 '게임의 룰'을 만드는 심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김동철 의원은 지난 21일 당무위 회의에서 "전대에 출마할 비대위원들이 사퇴할 생각을 안 하고, 3개월 뒤 지도부 선거가 나가겠다는 것은 얼마나 부도덕하냐"고 조기사퇴론의 불을 당겼다.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 중인 김영환, 박주선, 추미애 의원 등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최소한 이달 내에 '빅 3'가 당권 도전을 결정하고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내 비노 온건파 모임인 '민집모' 소속 모 의원은 "전대 출마가 유력시 되는 비대위원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드는 데 간접적 영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

했다. 하지만 문화상 비대위원장과 빅 3의 입장은 다르다. 전대 경선 룰이 전대준비위 논의의 거쳐 비대위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는 12월 초·중순에 사퇴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에 경선 룰 안건이 상정되기 이전에 당권 주자들이 비대위원직에서 사퇴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의원은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경선 룰이 비대위에서 논의되는 12월 중순 이전에 비대위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후보 등록 이전에 룰이 확정된다고 하면 출마를 생각하는 비대위원들도 그 전에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의 예산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

국회 상황도 조기 사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시적 지도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는데다 당권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빅 3'의 눈치 보기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의원 등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대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선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빅 3'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전대 출마 여부와 비대위원직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최고위원 회의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광주시당 1층에 '시민소통공간' 만든다

그동안 각종 시위 및 집회 장소가 됐던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시민 소통공간'이 만들어진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24일 "중앙당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당사 1층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며 "다음 달 초 '시민소통 공간'을 완공해 당원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취임한 김윤세 광주시당위원장의 공약사업으로 중앙당의 실사와 평가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시민 소통공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공연을 하거나 토론하는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교육장과 휴게실 등이 마련돼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김윤세 시당위원장은 "당사 1층을 리모델링해 당원은 물론 모든 시민이 '공간'하고 참여하여 누릴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 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노영민 "MB측근들이 자원외교 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를 설치, 자원외교를 주관했다"고 주장, 주목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총리실의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원외교 전반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 협의회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총리실 차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18회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의에서는 VIP 자원외교 사전조사와 후속조

치, 신규 사업 발굴, UAE 원전 수출, 세일리스 개발 등 굵직한 자원정책 전반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해외 자원투자는 공사에서 판단했다"라며 선을 그은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VIP 자원외교 45건 MOU 가운데 26건을 이 협의회가 추진했지만,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남아공 히토루 사업과 우즈베키스탄 탐사 사업 뿐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두언 "이명박정부는 실패했다"

'사자방 국조' 잘못 없다면 반대할 이유 없어

이명박정부 초기 '왕의 남자'라고 불릴 정도로 실세였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이명박정부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명박정부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에 출연, 초고를 완성한 자신의 회고록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자성을 하며 거기에 대한 교훈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될 제대로 밝혀본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해서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 물건을 사러 가면서 공표를 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올리겠느냐"며 "어마어마한 사람이 성과를 꼭 내야 한다고

판파르를 울리며 가면 얼마나 바보 같은 장사냐. 자원외교라는 게 개념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오늘 광주서 강연



최근 민생행보를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25일 광주에서 강연을 갖는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광주 방문

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자치정책연구원(원장 송경종)은 25일 저녁 6시 광주YMCA 무진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를 초청해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인권법 10년만에 국회 문턱 넘나

외통위, 여야 제출 법안 상정...처리 주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벌인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김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6월 27일로 약 10년 전이다. 당시 한 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포함해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5건, 19대 국회에서 11건 등 모두 19건이 제출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심

사가 이뤄지게 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외통위에 상정된 2건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28일 제출한 '북한인권 증진법안'이다.

김영우법안은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차례로 제출했던 법안을 아울러서 통합한 안이다.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두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심재권법안은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한 당의 중도노선 강화의 일환으로 입안해서 제출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북한주민·북한의 정치범·납북자들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북한인권법안 비교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법안명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증진법
발의 목적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 증진 기여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사업 규정
북한인권 보호 책임·지원 의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는 모든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함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인권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 북한주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하도록 함
정부 산하 조직 신설·운영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지원위원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협력대상자 신설 법무부 산하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실태조사, 정책개발,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부 산하 인권대화추진위원회·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남북인권대화 추진 결과·인도적 지원 및 교류 계획 등을 매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 관련 정보 수집·연구·보존·발간 등 업무 담당하는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 신설

연합뉴스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송금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택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소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광주·전남 기능장1호

프리모녀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녀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반비트 나루행 500m 안주우소
 대산프리모녀가발